

박지원 “전국 정당’ 민주당 위해 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7일 광주서 특강 열고 “지역구도 타파 힘 모아달라” 민주당 개혁 위해 “DJ 유산 ‘회합과 포용’ 뜻 모아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북당 이후 첫 호남 지역 특강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영덕·조오섭·이용빈 국회의원과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중요성을 들며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은 28석에 불과하다. 경남·경북은 65석이며 서울과 수도

권은 121석에 이른다”며 “호남에서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이 뽑혀도 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구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현 양당제 독점 체제와 지역구도 또한 무너뜨릴 것”이라며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 도입에 힘을 보태는 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없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려면

광주가 있어야 한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해결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과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싸우고 다른 손으로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과 안보 위기, 정치, 노동, 경제,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합과 포용을 토대로 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이당 대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부당해 헌재 더불어민주당 교문을 맡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만약 지금 DJ라면’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민주 “與, 1월 임시국회 응답해야...안보·민생경제 빨간불”

“국민 삶 책임져야 할 여당이 무응답”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불이 보이질 않나. 아니면 손을 놓고 대책 없이 지켜보겠다는 것인가”라며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

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께서 걱정하는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다”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

라며 “그러해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 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날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며 “국민의힘은 윤심을 두려워하는 10분의 1 만큼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1월 임시국회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가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했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부터 30일 동안 이어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9일에는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재환기자

민주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법률적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다”

“李 법률위반,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며 이같이 따져물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

본부인 이 장관은 위기정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호러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은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뺑뺑함을 보였다”며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뺑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 장관의 집착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인가.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 정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대신 이 장관의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